

A4-179		
PE 2/24	A4	179

97-24

제15대 대통령 선거 준비 토론집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RIDRIK)

137- 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전화(02)521-5364 / 팩스(02)584-7701
 하이텔 cohandi / 천리안, 나우콤 COWALK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97-24>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15대 대통령 선거 준비 토론집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통령선거와 장애계

정세
분석

손혁재

(정치학박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

1. 2000년 대통령선거

2. 2000년 지방선거

3. 2000년 국회의원선거

4. 2000년 정당선거

5. 2000년 정당선거

6. 2000년 정당선거

7. 2000년 정당선거

대통령선거와 장애인

손혁재

(정치학박사·열린사회연구소소장)

1. 왜 대선이 중요한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 '92년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선거가 정국을 끌어왔지만 이제는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대통령 선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대선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오늘날에는 정치와 행정,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 특히 장애인의 삶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장애인에게는 대통령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지금도 대선 국면을 맞아 장애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올바른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장애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애계가 정치권의 일 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장애계의 내부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정치가나 출마자들만 관심을 가질 일은 아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의 앞날과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에 관한 경구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 절대 권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표현한 말이다. 민주주의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표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선거를 먹고 자란다”고,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정치와 국가의 주인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복지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계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통령 선거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무조건 장애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거나 장애인 정책의 우월성만을 기준으로 대선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장애인 대 비장애인의 감정 대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사회적으로 열세인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정책도 실제 이를 실천할만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으로 표를 의식하여 선심성으로 나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92 대선을 돌이켜 보면 그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다.

2. 문민정부 4년과 올바른 대통령 선출

1) 김영삼 정부 평가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30년만의 문민정부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온 국민의 기대와 박수 속에 출범하였다. 그 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정권 최대의 과제로 내세워 적극 밀고 나갔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개혁은 실종되었고,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한자리 수를 밀도는 지지율에서 잘 드러나듯이 국민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말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한보사태를 통해 정치의 고질적인 부패와 무능이 드러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김영삼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이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국가 의사나 정책 결정에 일반국민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적 조직을 말한다. 개혁이 대통령 개인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국한되고 있는 개혁권위주의인 것이다. 개혁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사회전반으로 확대 심화시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보다는 부드럽지만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개혁권위주의 체제가 되고 만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개혁권위주의로 전락한 주요 원인은 취약한 정치적 입지와 미흡한 개혁 전략이다. 민자당 권력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기반한 개혁 의지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층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정과 개혁에 불만을 품고 등을 돌린 기득권 세력에 대해 개혁전략도, 정치적 입지도 취약했던 김영삼 정권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개혁과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화해와 권력 분점을 요구하는 기득권층

에게 굴복할 것인지 선택의 길목에서 김영삼 정권은 타협의 길을 택했다. 기득권층과 야합하면서 개혁 구호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김영삼 정권은 문민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는 한 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개혁을 과감하고 빠르게 밀고 나갔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져 이를 추진하지 않고는 권력행사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 출신은 아니나 3당합당을 통해 6공 체제의 안정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그 뒤 3년 동안 6공 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순수한 의미의 민간 정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탄생 초부터 노태우 정권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사정과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의 하나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이다. 군부를 개혁하고 병영으로 되돌려 보낸 것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만들었다든지 금융실명제와 토지실명제 따위를 실시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혁의 한계도 너무도 뚜렷하다. 5.18특별법 제정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은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폭로로 92년 대선자금에 쏠리는 의혹을 잡재우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한때 축소시켰던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노동관계법을 날치기로 개악한 것은 김영삼 정부의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내준다. 또 경제구조 개편 작업을 포기하고 재벌을 감싸안은 것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준다. 냉전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남용, 전교조 합법화의 거부와 비현실적인 교육 정책, 사회복지축소 등도 명백한 한계이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강경과 온건 노선을 되풀이하다 남북관계의 조정권을 미국에게 빼앗기고 민족간의 대립만 악화시키고 말았다.

개혁목표의 달성에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군사문

화를 청산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구체적 개혁 목표 및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개혁의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개혁의 첫걸음은 지난날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5,6공을 거쳐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정권의 낡은 정치적 유산을 뿌리뽑는 일이다. 30여년 동안의 구조화된 총체적인 부패 사슬을 제거하고 이 부패의 사슬을 뒷받침해주었던 각종 반민주 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뜯어고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동안의 잘못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준 법과 제도의 충실한 개혁을 바탕으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개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첫걸음은 지난날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5,6공을 거쳐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정권의 낡은 정치적 유산을 뿌리뽑는 일이다. 30여년 동안의 구조화된 총체적인 부패 사슬을 제거하고 이 부패의 사슬을 뒷받침해주었던 각종 반민주 악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뜯어고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 동안의 잘못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준 법과 제도의 충실한 개혁을 바탕으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개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절차가 중시된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좌절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불성실한 채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을 기준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치(人治) 논쟁이 일고 대통령의 인기라는 비합리적 잣대에 의한 바람몰이 개혁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또 봐주기 사정, 표적 사정 등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독주하면서 정치권이 무기력해져 정당정치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졌다. 이른바 깜짝소식 개혁은 정치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깎아내렸다. 모든 개혁이 대통령 1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책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 것이다.

2) 올바른 대통령 선출의 조건

적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면 후보의 검증과 선출 과정이 엄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선거가 아무리 공정하게 치루어져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국민은 각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무소속 출마도 있으나 우리 나라 정치 풍토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잘못 내세운다면 선거 결과도 잘못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대선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대통령 후보가 언제 어떻게 선출될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대선 출마자들은 사전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여론의 심판을 받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위로부터의 낙점'을 받거나 '형식적인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을 가진 정치인들은 선거 2년 전부터 그 뜻을 밝힌다. 그리고 예비 선거나 각종 토론과 연설 등을 통하여 통치 구상은 물론 자질, 도덕성, 사생활까지도 꼼꼼하게 검증받는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게리 하트나 케네디 같은 정치인들은 예비 선거 과정에서 여자 관계가 밝혀지면서 도중하차 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을 바르게 뽑기 위해서는 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후보 선출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리더십 계승의 과업, 즉 후계자 선출을 제도화 하는데 실패하였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당내 경쟁에 의해서 당원의 의사에 따라 후계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집권 여당의 경우는 더 심했다. 지금의 상황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대통령 후보가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반드시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통령 선출은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진행된다. 몇 달에 걸쳐 각 주가 독자적으로 예비 선거(preliminary election) 또는 코가스

(caucus; 당간부회의)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당대회를 통한 정당 공천의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예비선거 및 코가스에서 승리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 선거 및 코가스가 시작되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의 5-6개월 동안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통해 여과작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 공천을 예비선거나 지방당대회도 없이 중앙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기간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되므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 정당들은 모두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다. 야당은 말썽이 따르기도 하였지만 민주적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당은 현직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후보가 되거나 후보를 지명한 것이 관례였다.

올바른 후보 선출의 전제는 당원이나 지지자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는 자유 경선이다. 앞으로는 모든 정당이 실질적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야 하며 경선의 문호가 모든 당원은 물론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 경선 제도나 예비 선거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지금도 경선을 채택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추대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정당지도부의 후보 결정은 정당 내부의 규율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나, 지역적 기반과 금권을 장악한 카리스마적 지도자 중심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당내 경선이나 예비선거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대변하려는 정치인의 등장을 도울 것이다. 또 후보 선출 과정을 통하여 당원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높일 수 있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 이를 정당 지지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후보 선출은 많은 당원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와 동떨어진 후보가 선출된다면 그 후보는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당원의 지지조차 받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보 선출 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질이 되어야 한다. 지역성이나 계파의식 등이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지역주의의 폐해가 심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민주적 경선 원칙을 배제하는 비민주적 발상을 피해서는 안된다. 물론 지역 분열과 갈등은 기필코 극복되어야 하지만 지역간 권력 이동이 결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선 후보를 꿈꾸는 정치인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의 지도 이념과 정책 노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당내각 계파 간의 파워 게임이나 합종연횡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거나 당권자가 가부장적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마음에 드는 특정인을 후계자로 지명해서는 안된다. 여당의 경우 임기말 권력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속셈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자꾸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권력 누수가 일상적인 국정 수행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3. 대선에서 장애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장애인은 장애인 후보라든가, 장애계에 대한 공약을 따져보기 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에는 유권자 개개인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투표 행위란 그저 한 표를 던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한 표를 찍는다는 의미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이 돈을 뿌릴 것을 기대하거나, 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한 후보들은 돈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정치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어온 요인 가운데 하나가 타락 선거이다. 타락 선거는 사실은 유권자의 동조 내지는 방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날 일어났던 타락 선거의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깨끗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장애인들이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단체들이 해야 할 일

① 장애인의 정치 참여 권리와 기회 확대

사회적 편견과 함께 법과 제도적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약이 결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지체 장애인들은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되지 않아 상당한 고통이 따르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시각 장애인들은 홍보물을 보지 못함으로써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점자 투표의 미실시로 정확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표소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점자 홍보물과 점자 투표를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② 유권자 교실 개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 토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몽과 학습이 필요하다. 유권자 교실의 내용은 유권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의사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선거 유세 현장의 견학이나 토론 등을 내용 중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리고 장애 복지의 방향과 현실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권자 교실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 내년의 지방 선거 등 앞으로 계속해서 각급 선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없을 때에는 정치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

장애 복지 관련 단체들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각기 다르므로 장애계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토론

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 이외에도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후보자의 조건이라든가 선거 참여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자칫 이 공청회나 토론회는 특정 후보나 정파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청중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고 후보자의 정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특정 후보자를 단독으로 초청할 수도 있으나 후보자를 모두 초청하는 것이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다.

후보자가 바쁠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장애 복지 관련 정책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공명선거감시단 구성

사회단체는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 수 있다(선거법 제 10조). 부정선거를 공개적으로 고발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에 하거나 내부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발된 내용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른 시민 단체나 종교 단체들과 연대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⑥ 장애 복지 관련 공약 요구

각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들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장애계의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 인식도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공약의 개발과 제안은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이나 후보 진영의 장애복지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정책 방향의 올바른이나

실현 가능성 여부, 우선순위 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

① 빠짐없이 투표하기

장애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투표하는 것이다. 모든 유권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 행위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유권자가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통합선거법 제6조 제3항) 할 것과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취할 것(제6조 제1항)을 통합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투표권이 기본적인 참정권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일에 집을 떠나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도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부재자 투표(제38조)이다.

투표할 때에도 장애복지 관련 공약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지거나 지연이나 혈연 또는 학연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연고주의 정실주의에 따르는 투표 행태가 지난날 우리 헌정사를 비틀거리게 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또 선심공약이라든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마구 내세우는 것에 속아 서도 안된다.

② 돈 뿌리는 후보 떨어뜨리기

불법 선거 운동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마구 쓰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황이다. 철저한 공영제가 아니므로 선거에는 어차피 돈이 들게 마련이다. 문제는 꼭 필요한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표를 팔고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지상주의가 돈으로 표를 사려는 태도를 불러온다. 금권 선거는 필연적으로 금권 정치를 유발시킨다.

선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에도 손을 내밀게 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금권 정치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빈부 격차 등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금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그 돈을 받고 뽑아준 유권자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사려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갖춘 후보들을 지지한다면 타락한 선거 풍토는 개선될 것이다. 후보자가 돈을 뿌리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민간 공명선거추진운동기구에 갖다주어야 한다.

③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하기

불법선거 부정선거는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선거 부정을 보고서도 못본 체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 부정을 보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나 민간 선거감시단체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의 경우 물증이 있거나 그 정황이 정확하면 더욱 좋다.

또 그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되며, 가까운 이웃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역 감정에서 벗어나기

이번 선거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은 우리 나라 정치의 뿌리깊은 질곡 가운데 하나인 지역할거주의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⑤ 후보에 대해 관심 갖기

투표 행위는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판단 선택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후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후보에 대해 올바

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 홍보물이나 신문 광고를 꼼꼼히 챙겨 읽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는 것도 후보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연설회나 텔레비전 유세를 꼭 보아야 한다.

⑥ 자원봉사 활동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각 시민 단체의 공명 선거 감시 활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업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에서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고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후보에 대해 판단을 잘 내려야 할 것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금품 수수 행위 등 불법을 거부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통상적 범위의 다과와 음료만 대접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봉사자로 들어올 것을 약속받거나 모집신청서를 무작위로 배포하면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돈 안드는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활용한다는 자원봉사자들이 후보자와의 은밀한 거래로 오히려 부정 선거의 당사자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맺는말

대통령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겨레와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엄청난 변화와 시대적 역사적 요구에 발맞추어 개혁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란 무엇인

가?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집단에서 나와야 하는가. 새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지성 그리고 고결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엘리트가 절대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의 원대한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사로운 현실적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역사에서 창조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는 특정한 정치인이 당선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통일의 초석을 닦고,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청렴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연 혈연 학연 등을 떠나서 과연 어떤 리더십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장애계는 대통령 선거가 세속적인 일이라 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맞이해 서는 안된다. 물론 지나치게 대선에 민감할 경우 장애계의 파벌 다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현실을 나몰라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장애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대통령 선거는 치뤄지고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장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계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누가 장애 복지 관련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가 하는 점에 있지 않다. 물론 장애복지 관련 공약을 확실히 한 대통령이 탄생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를 통해 장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굳이 막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불리 장애 복지 관련 공약만으로 대선에 임하는 것은 자칫 장애계의 분열을 가져오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악화시킬 위험성

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선거 어떻게 맞을 것인가

장애인
계 분석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대통령선거 어떻게 맞을 것인가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한보사태가 그렇고 KAL기 참사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있다. 노동법, 안기부법을 새벽에 기습통과시켜야만 하는, 정치도 마치 전쟁을 치루 듯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다.

아직 선거 기간도 아니고 대통령후보가 아직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되는 텔레비전 채널은 소위 용(龍)으로 불리워지는 대권주자들의 동정관으로 떼워

지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신문의 1면톱기사는 당연 정치관련 소식이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정치문제를 요란하게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정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사회를 지탱해야 할 중심축 중에 하나인 정치가 고질적인 중병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혼란속에 빠져 들고 있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교포들이나 외교관들은 한국의 문제(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마다 할말을 잃고 있다고 한다. OECD에 가입한 나라에서 독재국가에나 있을성 싶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불행한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꼭집어서 말하기는 분명치 않으나 역동성을 잃지 않고 희망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희망의 21세기를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연구소는 올 초부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동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를 기회로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자는 데는 원칙적인 합의는 있었으나 결국 지금까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부족과 장애인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낼 기구를 구성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1. 지난 선거 상황에 대해서

군사 쿠데타와 체육관 선거로 치뤄진 5공화국 시대를 마감하면서, 87년 군사정권 하에서 직접선거가 치뤄졌다. 당시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가벼운 흥분도 있었다. 결과적이기는 하나 1노3김의 대결은 전국토를 4지역으로 등분하면서 노태우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군사정권은 연장되었다. 국민의 피에 의해 만들어 졌던 민주화의 열망은 패배주의의 확산과 지역주의 고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학생들도 노동운동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정치민주주의를 운동의 귀착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재야인사, 노동운동 경험자, 학생운동출신자들 그리고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정치로 정치권으로 몰려 갔다. 최소한의 운동성의 연속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의 정치구조 속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부문 운동의 지향점은 정치권으로 향해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사회 구조는 오직 하나의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는 해바라기처럼 불균형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인위적인 정치야합이 있게 된다. 그리고 '92년 대선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주의는 '87년보다도 더욱 심화되었다.

2.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서

'87년 대선에서는 군정종식, 광주문제, 12.12사태 그리고 안보문제(사상문제)등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그래서 정책공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앞뒤 맞지 않는 공약이 많았고 그리고 공약(公約)을 그야말로 공약(空約)함으로서 마구잡이로 남발했던 것에 비쳐보아서 알 수 있다. 당시 신문의 큰 제목을 보면 “서로 비난하며 공약남발”, “실현불가능, 국민현혹”, “남발한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우리 나라 땅 덩어리 모두 팔아도 모자라” 등등의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정책개발을 통한 공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92년 대선에서도 크게 차이 없는 것 같다. 그나마 '87년 대선 때보다는 '92년 대선에서는 비교적 전 분야에 걸쳐 자세하게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87년 대선과 '92년 대선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87년 대선에서는 정책공약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다루지 않은 것 같다. 그 원

인이 표와 연결이 안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모 당의 선거관련 책임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대상의 소외계층은 전통적인 여당표가 되는 것이 상식이어서 표를 겨냥하기보다는 끼워넣기식의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토로한 적이 있음) 더욱이 사회복지관련단체가 대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대통령선거에 복지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된다.

'92년 대선 또한 지역감정에 전적으로 기대는 득표전략을 세웠던 것 같다. '우리가 남이가'를 통한 지역 감정유발은 역대 선거에 못지 않는 지역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선거를 통해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보게된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러한 전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각 후보진영에서의 공약(空約)남발은 역대 선거보다 그 양에 있어서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어쨌든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회복지나 여성문제와 관련된 공약(公約)이 많이 발표되었고, 부분적으로나마 이슈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대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여성계, 장애인계 그리고 각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비교적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된 경위를 들여다보면 보다 대선에 적극적이었던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이 상당량이다.

3. 장애인계의 대선참여와 관련해서

'87년 대선에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찾기 힘들었다. 청년학생장애인조직인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연)가 각 후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전담행정기구 확충,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등록제 실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특수교육시설 확충,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 등의 요구 중 일부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나 공식공약집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참여했던 전지대연

에만 약속한 것으로 넘어갔다. 물론 이 당시 한국지체장애자협회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씨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87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의 공식적인 공약집에 장애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당차원의 논의 과정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후보의 즉각적인 대응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대선후보자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에는 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듯 싶다.

'92년 대선 당시 사회분위기는 '87년 당시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환경에서 치뤄졌다고 보여진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주요후보를 낸 민자, 민주, 국민당 등 3당이 공히 체계를 갖춘 공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내용을 보면

정책목표가 공히 사회통합을 전제로 했고, 장애인 전담기구 및 전달체계문제, 장애 복지관련 예산 확대방안마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문제, 장애인고용정책, 편의시설 확보, 주택보급, 장애수당 확대,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장애 관련 일반 서비스 확대문제 등 장애복지에 있어서 전 분야에 걸쳐서 다루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3당이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그 중 민주당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상당히 연구가 되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공약만을 놓고 본다면 장애인복지는 선거를 통해 상당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복지공동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민주당의 김대중후보만이 초청에 응해서 토론회를 가졌고, 나머지 김영삼후보와 정주영후보와의 토론회는 당내사정을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아 토론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생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유일한 기회였던 장애인복지관련 후보초청토론회에 응하지 않은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87년, '92년 대선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선거를 맞이한 장애인들의

정치적 관심과 요구를 표출시키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장애인 계층은 정치세력으로서의 자리매김에는 실패했다.

4. 왜 정치권은 장애계층의 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않은가.

지금까지 장애계층의 표가 별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애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400여만명이나 된다는 데, 그리고 그 가족과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유권자의 수는 1천만이 훨씬 더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유권자수를 가졌다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분명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표를 계산하는 후보진영에서는 장애인 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라도 장애인은 전라도표, 경상도 장애인은 경상도 표, 그리고 저소득 계층은 여당표라는 생각을 여야 후보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들이 정치참여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다. 상당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참여의 유일한 수단인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공약에 대해서 직접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역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사람들로 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전해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주관이 포함되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집단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장에 의해서 표의 향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정보가 차단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선거에서부터 일부이기는 하지만 후보들의 정견을 수화통역을 통해서 접할 수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 언론사들이 대선주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고 있으나 수화통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선후보자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투표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투표소가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28.1%여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투표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표하는데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제대로 기표하는지 의심하면서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투표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5. 이번 15대 대선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과제는

이번에 각 언론사들이 대선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보여준 단면을 보면 각 영역별, 직능별 전문가들을 주요 패널 중에 복지관련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질문분야를 정함에 있어서조차 그 내용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왜 그랬을까.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문제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나라에서 치뤄지는 선거에서 보면 복지문제가 가장 주요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이제라도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처해나가기 위한 전략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계가 극복해야할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계층의 대선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장애계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련 모든 단체의 결집된 모습에 대해서 논의일정이 빠른 시간 안에 세워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 조직과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그리고 개별 장애인들이 대선에 참여에 있어서의 역할 분화와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방안모색이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을 것인가

셋째, 각당 후보에게 제안할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계의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 공개적인 회합과 장애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가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과제가 장애계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

네번째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성과를 확대시켜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할 당위성이 있다. 장애인만 따로 사는 세계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문제는

다섯째,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어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당일 투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만이라도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언론에 비취지고 있는 대선후보자들은 대부분 지역주의를 근거로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요원해 보인다. 계속해서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구조가 고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장애인복지문제가 해소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쨌든 장애인문제가 대선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정책대안을 중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장애계는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지에 대해서, 또한 어떤 과정을 가져야할 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개혁의 발돋움

사회
복지

이 정 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연구부장

사회복지 개혁의 발돋움

이정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연구부장)

‘선거와 복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선거시기 복지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선거가 끝난 후 복지는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다음 선거 시기에 복지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성급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와 복지는 매우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복지의 최소한 선거시기에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며 선거가 끝난 후 복지문제는 구름 저편으로 사라지고 또다시 선거시기에 이르렀을 때 반복되는 과정을 겪는다.

정치권에 있어서는 선거시기에 사회복지문제, 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앞다투어 각양 각색의 사회복지 공약들을 쏟아 놓는다. 지방자치 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 등 역대 각종 선거에서 그러했다. 아마 그동안 쏟아져 나온 공약들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복지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장미빛 꿈', '환상' 그 자체이다.

사회복지계 내부적으로 마찬가지로이다. 선거국면에서 올바른 정책판단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선거에 임박한 그 시기에만 정치권에 복지문제에 대한 압력행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지속적인 모니터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대선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중동이다. 일부이기는 복지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현정부의 사회복지 평가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 개혁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본 토론은 선거시기에 사회복지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면,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동안 선거시기에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대응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개별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과 세(勢)는 약하지만 '공동대책위' 또는 "공동협의회" 형식으로 조직적인 대응방식이다.

우선 정당, 후보들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거나 개별적인 로비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로비와 압력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 특정분야에 대한 로비라 할 수 있다. 1992년 대선시 모 장애인단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한 예이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사회복지 특정분야의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인 로비를 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분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상층부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거시기에 임박하여 사회복지 개혁과제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이를 각 후보들에게 공약화 하도록하는 일이다. 그 예는 1992년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등 8개 복지관련 단체들이 9월에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복지 개혁을 요구하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사회복지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선거시기에 임박하여 진행되었다는 것, 운동 진행에 있어서도 조직적이지 못하였으며, 상층부 중심의 운동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운동 역량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올해 대선은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역량을 결집하여 진정한 사회복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의 몇가지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직적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운동의 진행 과정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1970년대의 사회복지운동은 노동현장이나 산동네의 철거현장을 중심으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간헐적,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왔다. 1990년대 이르러 사회복지운동은 각 부문별 운동에서 시민운동적 연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양과 질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선적 특징이며, 이에 따라 참여자들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운동의 내용이나 조직 뿐만 아니라 이론적 바탕 역시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운동의 연속성,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그때 그때 드러나는 이슈 중심의

운동이었거나, 개별적인 차원의 문제로 즉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개별 분야의 문제로 또는 개별의 이슈 중심으로밖에 운동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슈 중심의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슈가 정리되거나 흐지부지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은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다.

셋째, 운동의 연대성의 문제이다. 조직적이지 못하고 지속성,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개별화된 운동의 한계가 역량의 집중을 담보하는 연대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이든 연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사회복지 현실과 운동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운동의 폭과 내용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의 연대는 단순히 사회복지계 내부만의 연대가 아닌 시민 사회단체들과도 연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개혁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사회복지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각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 모든 분야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개혁과 확대의 우선순위를 합의하지 못한다면 운동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운동의 효과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놀음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복지운동의 문제점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사회복지 개혁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혁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

만 과거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의 경제성장의 종속물으로써, '선성장 후복지'라고 하는 성장 우선논리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확대 발전 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임과 동시에 힘의 역학관계에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 선거시기마다 정치권에서 수 많은 사회복지 공약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는 것은 선거시기에 득표를 위해 이른바 소외계층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기술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권의 정치적 놀음에 사회복지계가 휩쓸렸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확대 발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과연 얼마만큼 정치적 힘을 발휘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힘이 발휘되는 것은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적 합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즘 21세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간다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만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운동이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즉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다가오는 15대 대통령선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계가 과거처럼 정치권의 놀음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 개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기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치권 놀음에 또 다시 휩쓸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 절대적 과제이

제15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 합의를 이루어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합의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 생각되어지며, 이 논의가 단초가 되어 사회복지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을 맞는 장애인단체들의 의무

장애인
복지

이 석 형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회장)

대선을 맞는 장애인단체들의 의무

이석형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회장)

들어가는 글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회의 제 집단들의 이해가 달라지며, 그 사회가 얼마나 진보할 것인가도 가늠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전반, 특히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 그것은 어떤 사회가 장애인의 인권을 더 보장할 것인가는 결국 그 사회가 추구하는 내용, 그 사회가 중요시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신 군사정권 이래로 - 그 이전에는 논의조차 없었다 - 장애인단체에 팽배해 있는 생각은 '장애인복지는 여야가 없다'이다. 이 얘기는 마치 장애인복지가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누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의 일을 해야한다는 정치 결과주의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로 활용되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잡은 일단이 군인과 이에 지식과 양심을 팔아먹은 이들이 통치하던, 다시말해 그들이 여당이고, 계속해서 여당일 가능성이 농후하던 시절에, 단어적 의미가 아닌 규정된 의미로 악용되었다. 결국 힘 있는자를 설득하여 조금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했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권들도 이에 보답하여 쥐꼬리만한 장애인복지 예산을 그들에게 분배해 왔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우리는 장애인들의 인권은 마지막 숙제인 사회에 살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정치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인가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대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은 대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리고 흔히 두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하나는 후보들에게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요구하여 타 후보에 뒤질 세라 일단 모든 후보들이 표를 인식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면서 보다 많은 약속을 받아 내는 것이다.

과거 2차례의 대선을 통해서 보면 앞의 것이든, 뒤의 것이든 일정하게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 채 일부 단체

나 인사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그쳤다.

그리고 후보들은 너나 할것없이 실현되기만 하면 장애인의 인권확보도 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장애인 스스로의 움직임은 미약했지만 알아서 그 많은 것을 해주겠다고 하니 고마울만도 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약은 그야말로 빌공자 '空約'으로 끝난 것이 허다하다. 사실 선거전의 장애인분야를 포함한 그 많은 공약들을 보면서 언론에서조차 그걸 다 실천하자면 나라를 팔아도 모자르겠다는 지적이 나온터이니, 이를 믿고 있었던 장애인들도 그리 없었을 것이다. 우리 선거문화의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의 반성

대선이 사회복지 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국면임은 분명하다. 특히 해야 할 일이 많은 장애인계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과거의 반성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다시 공약만들기에만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본질적인 것이던, 비본질적인 것이던 어차피 공약이야 요구하지 않아도 후보들이 넘치도록 만든다.

여기서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400만이라고 부르짖는 장애인 표가 왜 힘을 갖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장애인은 진짜 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변혁운동, 사회운동, 복지운동 등 장애인운동을 하는 단체도 많고, 장애인친목단체도 많지만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선거에 있어서는 표를 모으는데 필요한 반쪽의 의미만 있는, 진짜 의미 있는 집단이 아니다. 후보들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공약을 걸고 당선되기 위한 표만 모으면 되는 것이다.

똑똑한 참모를 둔 후보였다면 장애인 정책이나 공약을 걸면서 오히려 신경을 쓰는 곳은 장애인계가 아니라 여타의 제 집단이었을 것이다. 왜? 너무 무리한 약속을 하는

것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어 장애인 아닌 다른 사람들의 표를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거전략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엇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약했다. 분야별로 단체별로 많은 절실함이 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얻어낼 수 있는 힘은 그것을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수많은 공약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와 관계 없이 끊임 없이 설득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현재의 장애현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고리, 앞으로의 싸움의 근거 등을 고려해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연구하고 고민하여 공약으로든, 정책으로든 받아들여지게 해야 한다. 결국 가지수로만 많은, 먹을 것 없는 잔칫상 수준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운동, 인권운동과의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애문제의 해결이 결코 사회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문제와 사회 제반의 복지, 인권의 문제가 같은 원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문제의 근간은 인권문제다. 생존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 이는 바로 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의 해결은 결국 중심된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란 모든 사회운동, 변혁운동, 복지운동이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무렴, 다른 제 분야가 뒤떨어져 있는데 장애인부문만 우뚝하니 진보적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장애현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장애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있다. 그리고 이를 인권문제로 보더라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는 인권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인권을 얘기하는 자체가 곧 반체제로 몰리는 현실의 벽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문제의 본질이 인권문제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곧 장애인을 사회적 장애로부터 자유롭게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생존권,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장애인은 복지를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는 어떤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인가.

첫째, 인간중심의 사회라야 한다. 우리는 개발독재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거쳤다. 물론 잘살아보세라는 경제지상주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최고의 덕목이요, 가치였다.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 1만달러, OECD가입 등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비단 장애인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제 분야가 아직도 전체주의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가 인간 중심으로 다시 변화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사회가 인간을 다양한 개성이 있는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한 장애인의 인권은 근본적인 면에서 결코 인정되기 어렵다.

모든 물질문명은 장애인을 사고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부담을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사회의 부를 분배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것은 국가 예산 중에서 우리의 사회복지비 비율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상 교육열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고학력은 성공의 지름 길이며 이는 강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강자는 부분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면에서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에 민감한 사회라야 한다. 지금도 우리사회는 인권을 외치면 자칫 반체

제 세력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 문민이라 하지만 여전히 개발독재, 군사독재 정권이 이루어 놓은 사회의 유지틀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은 정권의 유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권리에 대해선 민감하지 못하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변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힘으로 막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만큼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형사 고발을 많이 한다는 최근의 자료도 타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개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권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인권이 보호되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사회가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부담에 대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 사회가 떠안을 수 있는 한계를 이해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인식 혹은 편견의 타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를 달라고 한다. 그것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회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1급 지체장애로서 이동에 약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부분의 부족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맞는 노동을 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차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보조한다고 해도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도 많다. 그들에게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만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격체로서 생존권,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의

부를 그들을 위해 분배할 수 있는 사회라야 한다. 이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수용하는 사회라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의 운동을 하자

무엇이 장애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중심의 사회, 인권에 민감한 사회, 모든 이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기생적이고, 장애인문제는 여전히 마지막 숙제가 될 것이다.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목소리 큰 사람의 잘난체 정도로 취급할지 모른다. 그러나 희망이 없인 가질 수 없고, 꿈이 없인 싸워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책 속의 환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장애인도 인권운동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림만 그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인권만을 부르짖어서도 안되며, 사회와 합의되지 않는 이상적인 것만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또한 대선을 앞에 하고 무욕(無慾)의 점잖을 빼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최소한의 자원도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도 좋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금 우리의 목표인가를 설정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장애인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가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으며, 우리의 희망은 그들(권력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최상의 선택은 뛰어난 처세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언제 입어도 잘 맞지 않는 옷과 같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현실에 기반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버려

선 안된다. 현실적 대안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지금의 사회 틀을 깨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회로의 전진을 더 보장해 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명확히 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힘을 모으자

과거의 반성으로부터 우리는 장애인이 의미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장애인을 세력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장애인을 대표한다고 하는,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의무다.

현재 장애인계는 사실 분열되어 있다. 부분 부분 연합하고 있지만 그 연대의 끈도 그리 강하지 않다. 그리고 단체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일을 하며, 타 단체들의 역할들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그리고 권력의 힘을 빌어 무엇인가 얻어내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희망을 버릴 상황은 아니다. 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이번 대선에 힘을 모으자는 원론에 동의 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 만약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면 힘을 모아 세력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만이라도 머리를 맞대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노동약법을 앞에 두고 연대할 수 있었다. 원론에 합의할 수 있는 장애인과 단체들이 대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선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연대해야 한다

미국 자립생활 운동의 증추적 역할을 했던 렉스 후리덴이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이 없이는,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에게 평등이란 개념은 허공에 뜬 액체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ADA를 통과시키고 나서 앞으로 계속될 싸움을 상징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97년 사회복지 예산은 9천3백6십5억9천2백만원이었으며, 장애인복지 예산은 9백3십억2천6백만원이었다.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에 살고, OECD가입을 자부하는 국가에서의 이 초라한 예산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체코, 헝가리, 멕시코, 스페인보다도 우리의 사회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은 적다. 한마디로 기초적인 자원이 없는 것이다. 아니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그룹들을 위한 사회의 마음씀이 그 정도인 것이다.

언젠가 예산 편성을 보면서 어떤 장애인단체의 지도자가 사회복지 예산 중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비판이다. 만약 같은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장애인복지에 더 많이 배당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회복지 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권확보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인간중심의 사회로 발전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인분야가 더욱 더 심각하고 본질적이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덜 약한 이들로부터 빼앗아야 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복지를 위한 절대 자원을 더 확보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타인의 인권에도 민감한 사회로의 전진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대선 때도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사회복지 연대를 이번 대선에는 이루어야 한다.

불법도 감수할 수 있는 정신으로

우리는 선거법상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른 바 불

법선거운동이다. 따라서 개별 장애인 단체든, 단합된 장애인단체든 특정 후보를 지지
를 표명하거나,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지지난 대선에 모 단체의 회장이 공개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종의 선거운
동을 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장애인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했었다. 그러
나 그 형식적인 문제만을 봤을 때 난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어떤 정당이, 물론 사적
인 이해를 무시하고도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후보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더 장애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과정이며, 대선을 통해 장애인 복지 상황을 진보시키는데도 유리
하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400만 장애인과 가족, 주변인의 표가 그들의 선택에 합리적
으로 반영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
는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장애인단체는 불법도 감수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
야 한다.

미국의 장애인운동가들이 ADA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벌였던 일련의 과정은 대통
령 선거가 장애인의 인권회복에 중요한 기회 혹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까
마귀 날자 배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ADA에 서명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한
후 부시의 지지도가 듀카키스를 앞질렀다. 그리고 공약은 실천되어 세계에서 가장 선
진적이라고 미국이 자부하는 장애인법이 만들어졌다. 1990년 7월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많은 주에서는 주법에 의
해 그와 같은 혹은 더 진보적인 내용이 실현되고 있었다. 74년 재활법 이후 그들은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투쟁해 왔으며, 많은 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사회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
으며 선거의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유권자의 지지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이웃의 표를 인정 받은 것이다.

그들이 획득한 것은 단지 ADA가 아니었다. 스스로 뭉치고, 사회와 합의하며, 싸워
서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들은 해야할
수많은 일들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전의 경험과 투쟁의 동력으로 더 전진할 것이다.